

# 40년 묵은 K-1A 국산화 한다더니... 방산 비리에 '물거품'

(K-1A기관단총)



육군 중령 출신 A씨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넌받은 D사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 납품하려던 5.56mm 카빈형 소총.

‘카빈형 소총’ 요구 군 목소리에 방사청, 무리하게 국산화 추진  
우선협상 D사, 군사기밀 빼돌려 심의 따라 계약 취소까지 가능  
“신뢰성 검증 개인화기 도입 절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을 지난달 18일 잠정 중단했다. ‘K-1A기관단총(이하 K-1A)’을 후속할 신형총기 개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D사의 전직 임원 A씨가 지난 5년간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총과 관련된 군사기밀 등을 빼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달고 달고 K-1A를 신속히 교체해달라는 특전사의 바람은 ‘무리한 국산화 추진’으로 물거품이 됐다. 국내 업체의 탐욕이 전력화와 방위산업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셈이다.

◆ ‘K-1A’, 무리한 국산화 덕에 생명 연장만...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1980년대 개발된 K-1A는 ‘기관단총(SMG)’으로

우리 군은 분류하지만, 권총탄 대신 5.56mm 소총탄을 쓰는 개인화기다. 엄밀히 따지면 휴대성을 높인 카빈형 소총이다. 기관단총으로 분류된 것은 군 당국 K-1A를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사용돼 온 기관단총인 M3그리스건을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K-7소음기관단총도 운용 중이다. 이런 이유로 특전사 등에는 약 40년 간 성능개선이 거의 전무한 K-1A 대신 특수작전 수행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카빈형 소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대원들은 HK 416 등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카빈형 소총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K-1A

의 노후화에 따른 개인화기의 신속한 전력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육군의 신군가의 무직비디오에 특전사 대원들이 모형인 HK416 소총을 들고 나올 정도로 간절했다.

그렇지만 군당국은 소량을 구매하는 2형 사업과 별도로 다수 물량을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1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정치권이 선호하는 ‘국산화를 통한 수출기대와 고용창출’을 기대한 것이다.

결과는 전력화 시기를 놓친 방산비리로 끝났다. 이런 이유로 군 일각에서는 ‘노인학대 K-1A, 생명 연장의 꿈이나’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 **군용총기 후발주자가 우선협상 선정... 유착가능성 이미 제기**

군용 총기시장에 후발주자였던 D사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새고 있었던 것 아니냐’, ‘전직군인과 기업의 유착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D사는 지난해 6월 1형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한달 뒤인 7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사)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발견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군 검찰이 A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합동참모회의 등에서 다뤄지거나 결정된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mm 기관총(K-12),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D사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내용을 설명했다.

중령계급으로 육군본부에서 특수전 관련 총기 사업 등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A씨는 방사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D사 대표 B씨 등

에게 금품 600여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밀 유출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받은 금품 중 500만원은 퇴직금이라며 댓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D사 관계자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심의 결과에 따라선 계약취소도 가능하다. 계약이 취소되면 D사와 경쟁 중인 국내업체 S사의 총기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특전사 요원들의 주력 개인화기인 K-1A의 심각한 노후화를 고려하면 2형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1형 사업을 줄이더라도, 실전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개인화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국산화의 장점이 유지보수라고 하지만, 적진에 침투해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군인에게는 신뢰성이 먼저”라면서 “예전과 달리 방산물자 수입유통 업체의 역량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어, 후속지원의 문제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상반기 ICT 수출 21.5% ↑... 본격 회복세

산업부, 총 금액 1030.4억 달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호조세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21.5%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중 2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모바일과 PC용 수요 증가와 함께 인텔의 신제품 출시에 맞춘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ITC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한 103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상반기(1069억5000만달러)에 이은 역대 상반기 중 2위에 해당한다.

ICT 수출 증가세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회복, 상승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

폰 등 ICT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다. 상반기 반도체(575.1억달러, 21.3% ↑)는 D램과 낸드 단가 상승과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확대, 시스템 반도체 역대 최고 수출 기록 등 전체 ICT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엔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4.3% 증가한 1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억불대 수출을 달성했다.

메모리반도체는 견조한 수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 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107.8억달러, 38.0% ↑)는 액정표시장치 단가 상승, 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바일 수요 확대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부분품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9.7% 증가했고, 단가는 디스플레이 TV, 모니터 및 노트북용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대폰(64.7억달러, 33.3% ↑)은 완제품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 부분품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됐다.

다만, 지난달엔 해외 생산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한 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완제품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휴대폰 부분품은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73.1억달러, 6.2% ↑)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동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전년 동월대비 18.1%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480억 투입,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추진

환경부, 2025년까지 사업 진행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의 필수원료인 ‘초순수’ 생산 기술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025년까지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산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 공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된다.

초순수란 수백개의 반도체 생산 단위 공정 중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필수 공업용수다.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를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총유기탄소량(TOC)의 농도가 ‘10억분의 1’(ppb) 이하일 정도로 고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사용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 공업용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등 해외업체에 의존해 왔다. 특히,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시 타격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UV)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하루 2400t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업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초순수 생산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반도체 설계·시공·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까지 국산화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서욱 국방장관, 미 전략사령관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을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 코로나 4차 유행... 예비군훈련 전면취소

국방부 “대상자 전원 훈련 이수처리”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 전원의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육군이 ‘국가동원체계’라 불리는 온라인 상으로 후반기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지침 수정을 내린지 약 한달 여 만이다.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취소 결정은 현 시국에서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조건부 실시 등을 내세워 갈피를 잡지 못했고, 핵심 동원전력인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의 소집훈련마저 취소해 줄수있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일반예비군의 소집훈련은 전면 취소하고 동원 핵심전력만으로 기본적인 ‘동원체계 적응성 유지’와 ‘임무 수준유지’를 해야한다고 보도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 1769명의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은 보직 변경 및 임무 조정에 따른 부대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중 500여명은 신규로 지원한 예비군 자원이다.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은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되며, 연간 15일(예비군법상 최대 30일)까지 소속부대에 소집해 복무한다. 이들은 전원 지원한 정예자원으로 이중 상당수는 예비군 훈련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일부소집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가면서 일정과 소집인원을 분산 조정해 소집훈련을 신중하게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선발된 해군·해병대, 그리고 올해 선발된 공군 비상근복부 간부 예비군들도 각자의 소집부대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있다.

익명의 동원전력 업무 관계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의 경우 비상근복부 간부예비군의 소집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방위 사단의 경우, 동원관계자 및 현역장병의 중·창설임무 수준유지를 위한 ‘소규모 FTX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